

광주경제와 반도체 산업



데스크칼럼

최권범

경제부장 겸 뉴스콘텐츠부장
kwonbeom.choi@jnilbo.com

자동차 산업과 함께 광주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력산업이 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

지난 2010년대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집적회로 수요도 급증, 반도체 산업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이후 전자 및 IT 기기가 고도화되고, 반도체 적용 분야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확장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졌다.

광주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19년 36억7600만 달러, 2020년 38억1500만 달러, 2021년 49억8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8억7400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광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그간 독보적인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자동차를 제치고 선두 자리를 꿰차기도 했다.

광주 반도체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와 기술력이 자리잡고 있다.

광주에는 기아,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들이 여럿 있는데,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있다.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본사를 둔 반도체 후공정(조립·검사) 아

우소싱 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의 한국 법인인데, 국내 본사와 사업장을 광주에 두고 있다. 광주사업장은 1997년 설립됐다. 엠코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시장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기업으로 꼽힌다. 한국 내 매출의 90%가 광주에서 나오고 있으며, 전량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매출 2조6000억원대에 직원 수만 6000여명에 달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엠코코리아만 보더라도 반도체 산업은 광주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올 들어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공모사업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0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특화단지 공모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반도체에만 무려 15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반도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연구개발 예산 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등 지자체와 기업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수조원의 막대한 경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최대 3곳의 특화단지를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공모전에 '민선 8기 상생협력 1호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공동으로 도전장을 냈다. 광주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AI·차량용 반도체', 전남은 에너지 분야를 특화한 '전력반도체'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시·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동 조례 개정,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 등을 준비해왔으며,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에 걸쳐 조성된 첨단 3지구 산업 용지를 특화단지 후보지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번 공모전에 나선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하나같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을 내세우며 유치 당위성을 펴고 있다. 또 수도권 지자체들은 '균형발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5일 전국 15곳의 특화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경기 용인을 시스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산단으로 선정한 것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은 반도체 앵커(선도)기업은 물론 풍부한 용수와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전력·AI·자동차 산업 분야 연계, 전문 연구인력 등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끌 최적지임에 분명하다. 아무쪼록 광주·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꼭 지정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선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社說

찬반 팽팽히 맞선 광주전남연구원 재분리

시·도 각각 공청회 의견수렴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8년만에 재분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와 전남도가 16일 각각 개최한 공청회에서 분리를 놓고 패널간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쪽은 "통합 운영후 연구역량이 떨어지고 시너지효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쪽은 "시·도 연계 협력 강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동시간대에 열린 '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 공청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초발제를 통해 연구원 분리 쪽에 힘을 실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 통합 이후 연구원 1인당 연평균 연구 실적이 통합 전 대비 11% 감소했고, 구(舊) 전남연구원에 대비할 경우 21.1% 줄었다"고 밝혔고,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대도시 행정 광주와 중소도시·농어촌 중심 전남의 정책과제 동시수행에 한계가 있고, 대도시 광주 여건에 맞는 도시 문제에 특화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특광역시 중 독립연구원이 없는 곳

은 광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세를 가를 수 없었다. 찬성 입장을 나타낸 패널은 시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패널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연구원 역량 강화와 정체성 확립 등을 주장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운영 체제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강기정 광주시장이었다. 지난해 10월 광주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용역 과제 및 연구개발 부족을 지적하며 "통합 운영이 맞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의원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재분리를 주장하며 가속도가 붙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데다 지역 발전의 '싱크 탱크'가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통합과 분리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 하여 시도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든, 현 체제를 유지하든 간에 결론이 정해진 '답정너'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지역 내에서 충분한 논의와 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선행한 뒤 운영 체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NO 마스크'... 경각심은 필요

20일부터 착용의무 전면 해제

오는 20일부터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닌 데다, 감염병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재확산 우려가 높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는 '마지막 경각심'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5일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병원과 일반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고위험군과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도 권고된다.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1월 30일 1단계 조정 이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월 첫째 주 1만 6103명에서 3월 둘째 주 1만 58명으로 감소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다. 16일 하루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9934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9.24명이 확진됐다. 3월 들어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도 광주·전남에서만 9417명으로 집계됐다. 개인위생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해 있는 셈이다. 방역당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했지만 혼잡시간 대중교통에서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TO)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우리 정부의 마스크 의무 해제도 단지 의무를 유보했을 뿐 완전히 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노마스크 사회'로 가려면 무엇보다 자율방역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고위험군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모인 밀집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민 개인의 자율방역이 완벽한 일상회복을 담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광양매화마을 등 남도(南道)는 지금 봄꽃 축제가 한창이다. 꽃 구경을 하는 이들의 얼굴도 웃음꽃이 피니 자연 발화 그 자체다. 한데 언제부터인가 꽃을 대할때 땀을 흘리는 버릇이 생겼다.

꽃벌이다. 꽃 있는 곳에 있어야 할 이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부터 일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전남지역에서 50억마리로 추정되는 꿀벌들이 집단 실종 또는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꿀벌 27만 봉군(통) 중 약 60%인 16만 통에서 꿀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 야생벌의 40%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로 기후 변화 심화, 난

꿀벌 폐사 원인 '응애'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현, 살충제 남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처럼 꿀벌이 집단 폐사한 원인으로 우선 응애를 꼽았다. 응애는 꿀벌 전염병인 꿀벌응애감염증을 일으키는 해충이다. 또 농가들이 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해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응애가 이미 확산한 후 방제제를 과다하게 사용해 꿀벌 면역력을 낮춘 것도 피해를 가져온 원인으로 꼽았다. 그동안 꿀벌 폐사 또는 실종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가지 원인이 밝혀진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우선은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양봉농가들이 응애 방제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응애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축산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꿀벌농충봉아부패병과 꿀벌 부저병 두 가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만 가축재해보로 인정해 보상해주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목적으로 고시된 가축은 16개 축종으로 꿀벌이 곤충류로는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 꿀벌은 '기타 가축'으로 분류돼 별도의 꿀벌이 제2종 가축전염병인 꿀벌 농충봉아부패병과 제3종 가축전염병인 꿀벌 부저병으로 폐사(감염 병통 소각 포함)했을 경우에 양봉농가가 해당 질병특약 가입시 병통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제 꿀벌 전염병 뿐만 아니라 해충인 응애가 꿀벌 폐사와 양봉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 전체의 생태계 교란과 인류 식량 공급난 등을 초래해 인류 생명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꿀벌 멸종도 막고 양봉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틈틈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국회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기수 논설실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